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동향과 전북의 대응방향

2008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08. 2. 21



연구진

이 동 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 완 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정책자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동향과 전북의 대응방향

- I.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경과 1
- II.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향 2
- III.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자체 추진사례 5
- IV.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라북도 대응방향 8

I.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경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운영('05.8~)

-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제1차 위원회시('05.10.5) 의료산업선진화 추진방향 확정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용역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차 연구용역 추진('05.12~'06.6), 기본방향에 대한 3차 위원회('06.6.22) 및 청와대 보고('06.7.11)
 - 산업연구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1차 연구용역 실시(중개연구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센터, 재활·휴양기관 등이 집적된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 조성방안 제시)
- 구체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연구용역 추진(KISTEP, '06.10.30~'07.2.28)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심의 확정('07.6.5)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확정하고 첨단제품, 기술 개발을 목표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7.7.27)한 후 국회제출('07.9.28), 국회 정무위('8.2.18)통과

가 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08.2.26) 통과

-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등임

II.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향

□ 첨단의료산업의 필요성

- 의료산업은 BT, IT,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고수익이 보장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첨단의료분야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전략적 집중 투자 시 비교우위 시장 선점 가능하고 특히, 의료산업과 BINT 융합추세로 IT 분야 비교우위 활용 가능성이 상승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첨단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도출 지원 인프라의 부족, 첨단의료기기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기반 취약, 임상시험 시설 및 우수인력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첨단의료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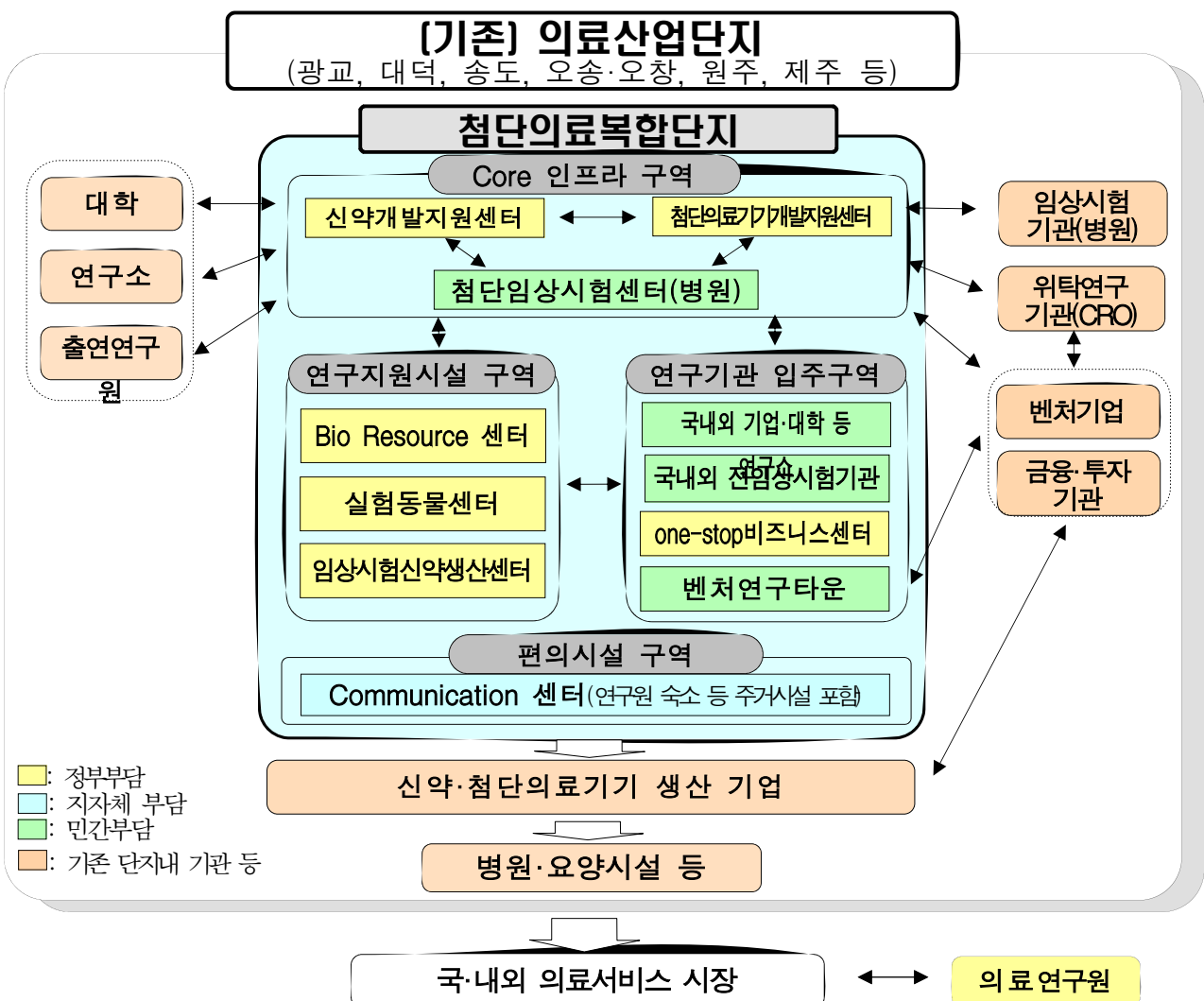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향

● 비전 및 목표

- ◇ (비전)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 ◇ (목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공간 제공

● 조성방식과 단지모형

-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초, 임상 연구 시설 등을 갖춘 기존 단지에 가장 취약한 응용, 개발 분야 R&D 역량 보강
-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 제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응용·개발 연구 중심단지



●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 단지규모는 국내외 연구기관 입주단지 20만평을 포함하여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하며 상주인력은 **4,500명** 수준으로 예상
- 투자규모는 향후 30년간 시설·운영비 1.8조원, R&D 비용 3.8조원 등 **약 5.6조원** 소요
- 비용분담은 정부·지자체·민간 공동부담, 중앙정부는 핵심 R&D인프라 시설 및 응용·개발 단계 R&D 비용 부담, 지자체는 부지·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시설비 부담,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부지 등 시설비 부담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시 **생산증가는 82.2조원, 고용창출은 38.2만명**으로 추정됨

● **최적 입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 우수 인력 유치	○ 우수인력 유치지원 - 생활여건, 소득지원 등	20%
	○ 우수 인력의 선호도	20%
○ 우수 기관 유치	○ 우수기관 유치지원 - 부지제공, 규제완화, 세제지원, 운영비 지원 등	20%
	○ 우수 연구기관의 선호도	10%
○ 우수 기관 인접	○ 우수 병원 인접	10%
	○ 우수 대학연구기관 인접	10%
○ R&D 지원	○ 단지내에서 수행되는 R&D 지원수준	10%

□ **첨단의료복합단지 향후 추진계획**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설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 신약개발 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기관선정
- 단지 조성 설계 및 공사
- 연구소 및 우수 인력 유치위원회 구성

Ⅲ.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자체 추진 사례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 치열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제적 효과 및 기대효과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및 활동이 치열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30여개가 넘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경기, 울산, 경남, 경북, 인천, 대전, 대구, 전남, 광주, 충북, 충남, 강원, 제주 등 전 광역자치단체가 유치활동을 전개
- 대전 등 충청권은 경부 대운하의 최대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부대운하가 시행될 경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전의 경우 충남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대전, 충남과 연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지역으로 인천 송도,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전 대덕특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간 공동 추진의 첫 사례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강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음
-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가 확실 시 됨에 따라 경북 포항과 연대하여 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제휴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한방, IT, BT 포함되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음

□ 지자체 추진 사례

지역	추진내용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테크노밸리를 통한 전략마련 • 광고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 완료되면서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바이오 연구소 등 55개업 입주, 아주대병원 인접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유치 추진 중 • 대구테크노폴리스내 35만평 복합단지에 종합병원과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모발생체영상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위원회 구성, 노인신도시 건설 계획 추진 • 첨단노화의료산업육성방안 마련,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한국 BIO-IT광주센터 건립, 치의공 전문인력양성사업, 의학·생명과학융합센터 설립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충남과 공동 추진 • 대전 R&D특구내 유치, 김시중 전 과기장관 유치위 참여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유치, 송도지구를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육성
부산·울산·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유치를 위한 공동전략 마련 •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에 바이오파크내 의약품개발과 의료관광서비스분야, 경남 김해에 의료기기개발분야, 울산 양산에 실버의료개발분야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첨단의료산업클러스터 구축, 국립암센터분원 유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바이오 중심의 특화단지로 조성 • 동남권 연구중심센터와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분야 기술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인력양성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
오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추진,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 충주대 안병우 총장 유치위원장(전 국무조정실장)
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연계 육성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과 휴양을 중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등과 연계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군과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유치 추진 •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컬클러스터 구축 추진 및 생물산업화연구센터 조성

□ 특별법을 둘러싼 상황 변인

● 입지 분산설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자체간 경쟁 치열로 유치 양상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별 공약에서 원주와 충북은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대구는 첨단 건강의료특화단지, 대전은 암전문의학 연구개발센터, 광주를 국립노화연구소 등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책 방향의 혼선 발생 가능성 높음
- 대통령 당선자 정책 방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 단지 건설이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특정 지역 선정을 통한 집중화 보다는 분야별 분산·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 새 정부는 창조적 광역 경제권 설정 정책에 따른 연계사업의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광역 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 가능성도 있음
- 실질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한 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특별법안에 이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분산 지정 가능성도 있음

● 입지선정 요건의 문제 제기

- 선정된 입지 선정 조건들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에 불리한 기준임
- 우수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선호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등의 선정기준은 수도권에 국내 우수 병원 및 기관들이 집중된 상황이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정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별법안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IV. 전라북도 대응 방향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필요성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82조원이상의 생산 과급효과가 있으며 고용창출도 38만명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유치할 경우 의료산업의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산업단지 건설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특성에 적합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가 필요함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전후방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인 부품소재산업, 의료기기산업, 전기전자산업, 식품산업 등의 기술 및 연구개발의 성장에 시너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음
- 첨단의료분야는 미래 유망산업이나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전라북도가 전략적 투자 및 인프라 형성 시 일부 비교우위 시장 선점 가능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라북도 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의료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호남권 지역과 연계할 경우 환황해권 첨단 의료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임

- 첨단의료분야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환황해권 시장인 중국의 경우 값싼 노동력과 중급 기술을 이용한 중저가 의료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첨단 의료산업을 추진할 경우 환황해권과 인접하여 있는 전라북도 의 경우 첨단의료 시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전국 의료 관련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의료기관	의료기관병상수	의약품제조업소	의약품판매업소	의료인력
전국	54,728	410,581	3,470	25,727	163,943
서울	13,963	66,267	569	6,240	46,004
부산	4,145	35,289	154	1,812	14,911
대구	2,902	21,500	103	1,513	10,269
인천	2,355	19,133	234	1,058	6,391
광주	1,558	14,940	48	935	6,594
대전	1,823	15,248	87	868	5,666
울산	1,067	8,788	28	412	3,099
경기	10,681	74,882	1,412	4,530	25,591
강원	1,498	15,668	117	823	5,455
충북	1,538	13,460	181	825	3,941
충남	2,174	17,289	200	1,151	4,963
전북	2,312	20,354	67	1,187	6,456
전남	2,137	21,693	46	1,203	6,414
경북	2,792	26,426	119	1,415	7,118
경남	3,166	36,607	96	1,493	9,706
제주	617	3,037	9	262	1,365

자료: 통계정보시스템. (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 전라북도 의료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2,312개소, 의료기관 병상수 20,354개, 의약품제조업소 67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187개소, 의료인력 6,456명으로 양질의 의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 전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 교육기관, 양질의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 대응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의 잠재력도 높은 편이고 관련 산업인 기계, 부품소재, 식품산업, 섬유산업 등은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전북은 의료(한방)와 섬유, 식품, 부품소재, IT, 기계 산업 등과의 융합화를 통해 첨단의료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한방의료기기의 경우 선진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전북을 전통적인 동양 의학권의 핵심 지역으로 집중 육성,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한방의료기기 제품을 첨단의료산업과 연계할 경우 의료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도내 의료산업은 제약사 부족 및 의약품 산업 구조의 미흡, 의료기기산업 업체의 영세성 등과 동시에 의료기술 부족과 의료산업 투자 미흡 등으로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함
- 전라북도가 의료산업 발전 전략 마련 지연 시 중앙정부의 첨단 의료산업의 투자 확대과정에서 지역 내 의료산업의 급속한 경쟁력 상실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틈새 공략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의료산업의 집중 발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유치지역 선정 및 추진 전략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 전략은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제1안은 전북, 광주, 전남이 공동 유치 추진 체계 구축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고 제2안은 전북이 독자적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 **제1안 : 5+2 광역경제권(가칭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수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연계사업, 인프라 확충, 공동발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정책은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인프라 구성 방향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역별 특성 및 산업 기반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 경제권 정책과 전략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전략임
- (가칭)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포괄하는 호남권 연계 공동협력 추진 방식임
- 첨단의료산업의 유치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의료인력,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각각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간, 산업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호남권의 의료산업 발전과 지역의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산업 등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광역권 형태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이 효과적 전략임. 또한 호남권 공동 추진방식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전략임
- 호남권 공동협력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에 적합한 특화분야 및 거점도시를 선정하여야 함. 전라북도는 의료산업에

대한 인프라 및 거점도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는 첨단노화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은 화순에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의료시장의 진입 및 핵심산업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전라북도에 유망한 특화분야를 선정해야 함.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 핵심 인프라로 이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특화분야 선정 및 전략 마련 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핵심 인프라 및 기능]

핵심인프라	주요 기능
신약개발지원센터	혁신신약 후보물질 평가공동연구 수행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지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병원)	혁신신약의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등

- 전라북도의 특화분야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첨단의료기기개발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머징 시장 단계에 있는 첨단의료기기(로봇, 휴대형·체내 진단기 등)를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첨단의료기기개발은 높은 소득 탄력성을 가지며 지속적인 시장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적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성장유망산업임
- 첨단의료기기개발은 종합응용과학으로 기능성 의료섬유, 이식형 로봇, 혈관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의료정보화 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첨단의료기기개발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식품산업 등의 산업 기반과 한방 인프라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장·단점]

장·단점	내 용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정책 기조에 부합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산업의 활성화 추진 · 광역 경제권으로 인한 신 의료산업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 확대 · 타 지자체 경쟁으로부터 비교우위 확보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이 후발지역으로서 유치 관련 전략 이슈를 선점할 가능성이 낮음 · 전남과 광주 지역에 비하여 의료산업 추진에 있어 전북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한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음 · 광역경제권 설정 전략 마련을 위한 전북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 유치 위원회 구성 · 공동유치 추진단 구성 · 공동 유치 전략 구상

- 특화분야의 선정에 있어 혁신 신약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첨단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개발임. 합성신약은 향후 10-20년간 세계 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연구 성과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신약 개발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시장 투입에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 및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위한 특화방향 안]

지역	주요 방향
광주	노인 관련 첨단 의료산업 육성
전남	생명과학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바이오 및 메디컬 클러스터
전북	첨단의료기기 중심 전략(고령친화산업, 식품산업연계)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에 있어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초, 임상연구시설 등을 갖춘 기존 단지에 R&D 역량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라북도에 적합한 입지 지역을 결정하고 호남권 유치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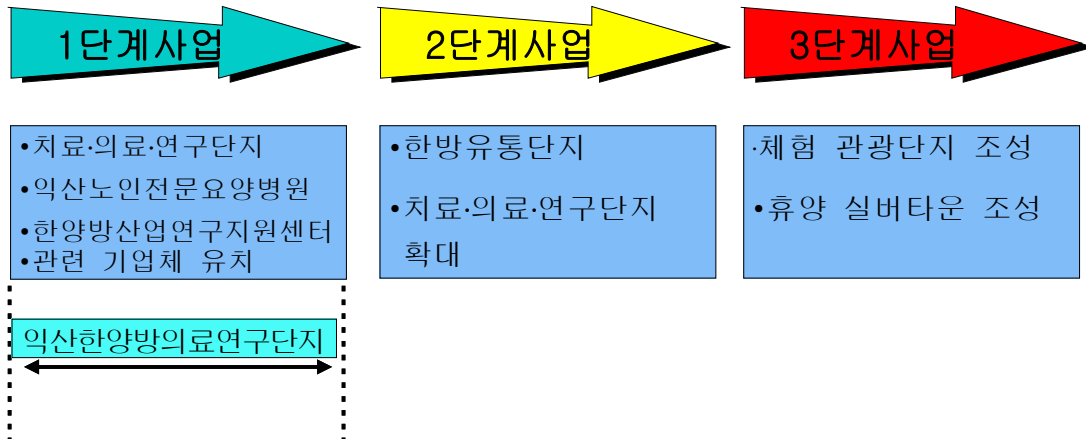
● **제2안 : 전라북도 중심의 지역 내 유치방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의 선정 기준은 병원, 대학 등 관련 기관의 지리적 인접정도, 지자체의 R&D 지원수준, 우수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지원 등이 고려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익산, 정읍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① **제1 후보지 : 익산**

- 익산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료의료연구단지, 한방유통단지, 휴양실버타운 조성 등의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익산은 한양방 병원 및 대학 등이 입지하여 있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상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됨

익산 종합 의료 과학 산업 단지



② 제2 후보지 : 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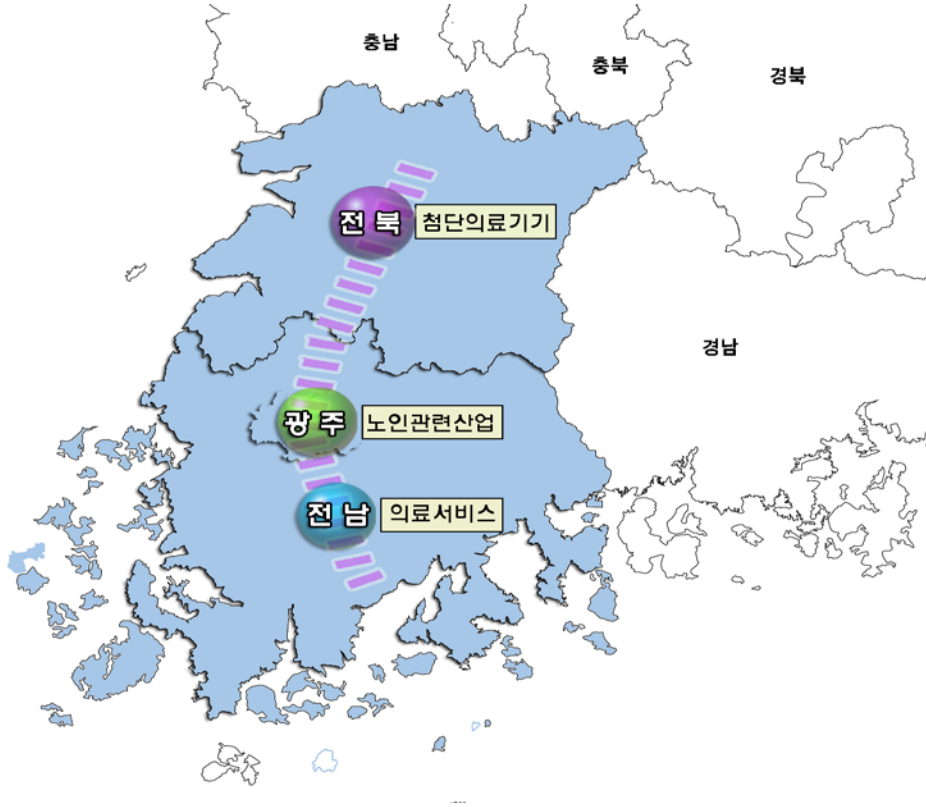
- 정읍은 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등 국책 기관 등이 설립되어 R&D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RFT 분야의 첨단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과학창조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유치 지역으로 가능함

[전북 지역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의 장·단점]

장단점	내 용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산업 발전 가능성 확대 • 지역내 연계를 통한 전북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보다 유치 후발 지역으로 유치 가능성이 희박함 • 유치를 위한 시스템 및 예산 확보, 전략 방안 구상 등에 있어 어려움 예상 • 지역내 참여 지자체 확보의 어려움

● **최종안 : 5+2 광역경제권 대응 전략안으로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특화 및 연계 안]



□ **추진 로드맵 및 추진 방향**

● **로드맵**

구 분	내 용	주체
•정책동향분석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분석	•전발연, 광주,전남 연구원 •전북, 전남,광주
•전문가 워크숍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효과 및 특화방향 선정	
•용역타당성 검토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및 첨단의료산업 발전방안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추진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조성방향 및 첨단의료산업 발전방안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족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유치 활동 전개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유치활동 전개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건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 전략 및 정책 방안을 전남, 광주에 제안
- 새 정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고 5+2 경제권의 핵심은 산업 정책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남권을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
- 전라북도 보건위생과를 중심으로 하여 광주, 전남 실무 부서와 협의하여 공동 추진 방식의 합의 체결

● 광역경제 공동발전을 위한 호남권 경제협의체 구성

- 정부의 광역 경제권에 대응하고 호남권 경제발전과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협력, 호남권 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호남권 경제 협의체 구성
- 호남권 경제협의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광역 경제권에 대한 정책 대응 등 호남권이 공동으로 하나의 시장이 되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연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호남권 전체를 미래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

- 호남권 경제협의체는 전북, 전남, 광주 지역의 시장 및 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호남권 경제협의체 구성 운영 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 및 실무위원회 중심의 체제로 운영
- 호남권 경제협의체는 호남권 광역 경제활성화 공동 발전 방안 연구, 호남권 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해외 수출 마케팅 사업 공동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 대응,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호남권 공동 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3개 시·도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
- 호남권 경제협의체의 추진체계는 기업인, 경제단체, 실무부서 등의 민간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며, 호남권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사무국은 공동 사무실 없이 시·도별로 따로 설치하여 운영
- 호남권 경제협의체의 실무협의회는 전북-광주-전남 등의 관련 국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 하며 1년의 임기로 설정, 사무국 운영 주관의 경우 선출된 위원장이 담당

● 정책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입지 선정 방식 및 추진 위원회 구성, 타 지자체의 대응 전략 등을 분석하여 호남권 공동 발전 대응 방안을 마련
- 추진주체는 3개 시·도 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과 시·도(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

● 전문가 워크숍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광주, 전남 지역의 역할 분담 및 특화 분야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전문가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한 의료산업 광역화 방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한 호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방안, 3개 지역의 의료산업 특화 분야 선정 및 육성 전략 등임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공동 용역의 필요성, 공동 유치 활동 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포함시켜야 함
- 전문가의 선정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주무 부서는 국무조정실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임. 따라서 국무조정실 인적자원을 활용한 위원회 구성 필요
- 유치추진위원회의 구성 시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주의 유치추진위원회와 연계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에 적합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의 유치추

진위원회를 흡수하여 통합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새로운 형태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현 유치추진위원회를 존속하고 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공동유치추진 TFT 운영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광주, 전남의 공동 추진 TFT 구성함. TFT는 3개 지역의 실무 공무원,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